"U대회 코앞인데 …'안전도시 광주' 아직 멀었다"

취약 시설물 DB화 안되고 관련기관 협조 부족

광주발전硏 양철수 연구원 발표 … 종합방재센터 구축 시급

광주 도심이 노후화되면서 아파트 균열, 옹벽 붕괴 등 시민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광주시의 안전대책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발전연구원 양철수 연구위원은 4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발전연구원 2014연구성과 보고회'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안전·안심도시 조성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양 위원은 "광주는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 7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에 따라 안전·안심도시 조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추진중인 안전 시책 대부분은 교통사고와 범죄 등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자살이나 낙상 등과 같은 인명피해가 많은 생활안전분야에 대한 대응 체계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특히 "도시 전반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프라 부족으로 안전사고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및 통합적 대응 체계 구축이 미비해 사고율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은 개선 대책으로 "가칭 광주종합방재센터를 구축해 긴급전화부터 응급복구 및 지원까지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야하며,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모든 과정에 걸쳐 재해위험도를 세밀하게 평가·반영하는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행정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방재지구(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한 곳) 지정을 확대하는 등 수동적인 재난 안전관리 대책에서 벗어나 안전·안심 중심의 새로운 안전관리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세부적으로는 타 지역에서 시행중인 재해정보 지도 작성·제공,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좁은 골목길 등에 기초소방시설설치 및 소형소방펌프차 구비 등 다양한 안전 선진사례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은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 등도 주문했다. 안전점검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한 DB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불가능하다는 게 양 위원의 주장이다.

양 위원은 "광주가 안전도시가 되기 위해선 가정 먼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종합적 예방)이 선행돼야하며, 재난 대비·대응 태세 확립(통합적 관리), 참여·소통으로 도시안전 강화(안전문화 확산) 등 전략적 대응 단계를 구분하고, 이후 세부적 실천과제를 수립해 시행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서창천 명품하천 된다

광주시 360억 들여

생태하천 2㎞ 조성

광주 풍암제에서 시작해 매월동과 벽진동을 거쳐 영산강으로 합류하는 도심 하천인 '서창천'이 명품하천으로 거듭난다.

광주시는 4일 "오는 2017년까지 총 360억원(국비 60%)을 투입해 서창천을 깨끗한 물과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품하천으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창천(총연장 7.58㎞) 중간 지점인 서구 매월동 '이지스위트밸리' 아파트에서 벽진동 2순환도로까지 2.12㎞ 구간을 자연 생태 하천으로 조성하게 된다.

시는 서창천 하천 환경을 자연상태에 가깝게 복원하고 '고향'과 '강'에서 느껴지는 감성적 이미지를 하천에 접목해 하천과 지역을 연결하는 문화공간과 지역 상징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내에 전국 하천의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명품하천조성 실무TF와 교수 등 전문가로 명품하천조성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주민 아이디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민·관·학·연이 공동으로 명품하천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순남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장은 "도심을 흐르는 서창천을 명품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명품하천으로 조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사우디아라비아 비즈니스 포럼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 알 자밀 사우디 상의 회장(왼쪽)등 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조 규모 토종 스마트원전 사우디에 첫 수출

한-사우디 MOU 체결

제3국에 공동 수출도 추진

2조원 규모의 토종 스마트(SMART) 원전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해 시범운영하고, 사우디와 공동으로 제3국에까지 수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빈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스마트 공동파트너십 및 인력양성'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관련기사 14면>

스마트는 대형원전의 10분의 1수준인 10만㎾급 중소형 원전으로 전기생산, 해수 담수화 등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냉각수 대신 공기로도 원자로 냉각이 가능해 내륙지역에도 건설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소형 원자로 분야에서 미국 등 선진국보다 5년 정도 기술이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MOU에 따르면 양국은 공동투자를 통해 예비검토사업(PPE)를 실시하고, 사우디에 20억달러 규모의 스마트 원전 2기를 시범건설해 제3국 공동수출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카이스트 교수진 및 학생을 사우디 대학에 파견해 학·석사 과정의 원자력 공학과 개설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사우디의 '킹압둘라 원자력재생에너지원'(K.A.CARE)간 원자력 인력양성 공동센터 설립 등도 추진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사우디가 우리의 중소형 원자로인 스마트를 협력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기술적으로나 효용성 측면에서 '스마트한 선택'이었다"며 "세계 최초 중소형 원자로 상용화와 제3국 공동진출 추진을 통해 세계시장을 함께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거꾸로 가는 광주·전남 상생

시·도의회, 조례안 처리 신중에

발전연구원 통합 상당 지연 전망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발전의 의제 중 하나로 추진한 시도발전연구원 통합이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광주전남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공청회에서 통합 찬반이 팽팽한데다 보완대책 마련 등 신중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선 6기 광주시와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상생협력이 첫 걸음부터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장기 침체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9일 열리는 임시회에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통합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전남도도 10일 개회하는 임시회에 회부할 계획이었으나 광주시의회 보조를 해야 하는 만큼 유보할 계획이다.

시도의회가 조례안 처리에 신중함을 보이는 것은 통합-분리-통합의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후유증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2007년 분리 당시 명분이었던 공동운영에 따른 책임소재 불명확성, 시도 간 이해관계 연구에 대한 기피 등 문제점, 정책지원 체계 이원화에 따른 조직력 취약 등이 이번 통합으로 해소되겠느냐 하는 점이다.

시도의회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시도 상생 의제로 1호로 등장한 연구원 통합이 근본적인 대책 없이 추진된 뒤 '다시 분리'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 1991년 7월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처음 문을 열었으며 1995년 6월 광주시가 출연하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통합운영됐다.

이후 지난 2007년 분리된 뒤 지난해 7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양 시도 상생발전 명분으로 다시 통합을 추진 중이다. 현재 통합 조례안이 양 시도의회에 제출됐으나 의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 한 채 표류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차세대 청정에너지 디메틸에테르

광주육묘장 실증설비 본격 가동

청정하고 저렴해 석유연료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는 디메틸에테르(DME·Di-methyl Ether)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실증설비가 준공돼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간다.

DME와 관련해 장비를 설치해 성능과 효과를 시험하는 실증설비가 준공돼 가동에 들어가는 것은 광주가 처음이다.

광주시는 4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광주영농조합법인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 대지동 광주육묘장에서 DME 실증설비 준공식을 했다. DME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 온풍기 2대를 설치해 각종 채소와 농작물 육묘에 필요한 열을 공급하게 된다.

또 35㎾급 열병합발전기 1대로 현장에서 필요한 전력을 직접 생산해 사용하는 등 분산전원 실증도 함께한다. 사업비 4억5000여만원은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하고 실증사업 이후에도 시설을 광주육묘장측이 소유하게 된다.

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한국가스공사 등과 함께 'DME 농어촌 현장 적용 및 친환경 그린카 생산도시 조성사업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DME(Di-methyl Ether)는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반응시켜 합성하는 물질로 물성과 열량이 LPG와 유사하고 연소 시 대기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일본, 중국, 터키 등에서 차세대 청정연료로 LPG와 혼합하거나 단독으로 가정이나 차량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